

1.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행정법은 통일적인 법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 ② 행정관습법에는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까지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 ③ 우리의 경우 판례에는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 ⑤ 서울특별시 조례는 보건복지부령에 위반될 수 없다.

☞ ①④ : 모두 옳음. ③ : 옳음. 우리나라의 경우 판례의 법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판례의 사실상의 구속력은 인정된다. ⑤ : 옳음.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된다 (지방자치법 제 15 조 참고). 따라서 조례는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위반될 수 없다. 부령은 법규명령의 하나이다. ② : 틀림. 관습법에는 보충적 효력만이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이다. (정답) ②

2.

대통령 후보자 甲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은 (㉠)행위이며, 당선증 교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에 보충할 수 있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무엇인가?

- ① ㉠확인 ㉡수리
- ② ㉠공증 ㉡통지
- ③ ㉠통지 ㉡공증
- ④ ㉠확인 ㉡통지
- ⑤ ㉠확인 ㉡공증

Ⓔ 당선인 결정은 확인이고, 당선증 교부는 공증이다. (정답) ⑤

3. 행정행위의 부관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부담
- ② 철회권의 유보
- ③ 법정부관
- ④ 해제조건
- ⑤ 기한

Ⓔ ①②④⑤ : 이들은 모두 행정행위의 부관에 해당한다. ③ : 법정부관은 부관이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부관이 아니다. 부관은 행정청에 의해 행정행위에 부가된 행정행위의 종된 규율을 말하는데, 법정부관은 입법자에 의해 부가된 것으로, 행정청에 의해 행정행위에 부가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답) ③

4.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 ① 헌법과 행정법은 협의의 공법이라 할 수 있다.
- ② 큰 정치적 변화가 있으면 헌법은 물론, 행정법도 항상 파기된다.
- ③ 헌법이 행정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유지시키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로 헌법 제 107 조 1 항 및 2 항을 들 수 있다.
- ④ 헌법의 규정과 정신은 행정법의 해석에 항상 지침과 기준이 된다.
- ⑤ 헌법은 행정법의 성문법원 중 하나이다.

Ⓔ ①④⑤ : 모두 옳음. ③ : 옳음. 헌법 제 107 조 1 항은 위헌법률심사제도에 관한 규정이고, 헌법 제 107 조 2 항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여부에 대한 심사제도에 관한 규정이다. ② : 틀림. 헌법과 행정법을 비교해 보면 헌법은 정치성이 강하나 행정법은 기술성·수단성이 강하다. 따라서 헌법은 혁명과 같은 커다란 정치적 변혁에 의해 파기되지만, 행정법은 혁명과 같은 커다란 정치적 변혁이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행정법

의 특징을 오토 마이어는 ‘헌법은 변하지만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 (정답) ②

5.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특별권력관계는 법률의 규정 또는 상대방의 동의에 의해 성립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과의 관계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 속한다.
- ③ 종래에는 특별권력관계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④ 공무원의 훈련에 관한 행위는 외부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⑤ 오늘날에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①③⑤ : 모두 옳음. ② : 옳음. 국가와 국가공무원과의 관계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과의 관계는 상대방의 동의에 의해 성립하는 가장 전형적인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한다. ④ : 틀림. 오늘날에는 특별권력관계에도 원칙적으로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또한,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도 원칙적으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 중에는 성질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되는 바, 공무원의 훈련에 관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④

6. 다음 중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별하는 필요성을 가장 옳게 기술한 것은?

- ①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 ② 공익과 사익의 구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 ③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 ④ 행정행위를 가능하면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 ⑤ 행정청이 자율성을 가지는 범위를 보다 확대해 주기 위하여

㉔ ②③④⑤ : 이것들은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별하는 것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① : 옳음.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가 전면적이라면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로 제한된다. (정답) ①

7. 현행 행정절차법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공법상 계약,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② 신고절차, 행정지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③ 입법예고절차를 결한 법령의 효력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④ 절차상 하자의 치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⑤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 3자에게도 행정청은 의무적으로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 ㉔ ①②③④ : 모두 옳음 ⑤ : 행정절차법에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의 제 3 자에 대해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정답) ⑤

8. 행정소송의 한계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사실행위에 관한 분쟁
 - ② 행정상 권한 분쟁
 - ③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
 - ④ 통치행위에 관한 분쟁
 - ⑤ 반사적 이익에 관한 분쟁
- ㉔ ①②④⑤ : 이들은 모두 행정소송의 한계에 해당한다. (정답) ③

9.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행정심판의 청구
- ②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응시행위

- ③ 영업허가의 출원
- ④ 선거권의 행사
- ⑤ 각종 신고의 수리

Ⓢ ①②③④ : 모두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한다. ⑤ :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이지만, 신고에 대한 수리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이다. (정답) ⑤

10. 법규명령에 대한 것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 ② 위임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다.
- ③ 집행명령은 추상적 근거만으로 발할 수 있다.
- ④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
- ⑤

Ⓢ 지문이 전부 복원된 것은 아니지만 ④번 지문은 명확히 틀린 것이므로, 정답은 ④번이 된다. (정답) ④

11. 다음 중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인 재량준칙을 법규로 전환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 ① 평등의 원칙
- ② 협력의 원칙
- ③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 ④ 보충성의 원칙
- ⑤ 과잉금지의 원칙

Ⓢ 설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평등의 원칙이다. (정답) ①

12. 통치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인 甲의 특별사면신청에 대한 정부의 거부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에 속하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본다.

③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학설로는 사법자제설, 재량행위설, 기관양태설 등이 있다.

④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개괄주의 및 국가배상책임이 제도적 전제로서 인정되어 있어야만 통치행위를 논할 실익이 있다.

⑤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원리, 비례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 ①②⑤ : 모두 옳음. ④ : 옳음. 개괄주의가 채택되어 있다는 것은 통치행위부정설의 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개괄주의의 채택이 통치행위부정설의 논거가 된다는 점과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논의할 현실적 필요성 내지 실익은 개괄주의가 채택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것은 구별하여야 한다. 개괄주의가 확립되어 있을 때 과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논의할 실익이 있게 된다. ③ : 틀림.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학설로는 사법자제설·권력분립설(내재적 한계설)·재량행위설·대권행위설 등이 있다. 기관양태설은 통치행위와 관련된 견해가 아니라 행정의 개념과 관련된 견해이다. (정답) ③

1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속하면서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안양시 동안구

② 대전광역시

③ 성남시 수정구

④ 화성시 봉담읍

⑤ 목포시

☞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보통지방자치단체는 다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市(=특별시 및 광역시)·道」를 말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市(=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市)·郡·自治區」를 말한다. 한편,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市로서 인구가 50 만 이상인 市에는 「자치구가 아닌 區(=단순한 행정구역인 區)」를 둘 수 있는 바,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市에 존재하는 區는 자치구가 아닌 단순한 행정구역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郡·面·洞도 단순한 행정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①③ : 인구 50 만 이상의 市에 두어진 「자치구가 아닌 區」임 ② : 광역지방자치단체임 ④ : 단순한 행정구역에 지나지 않음 ⑤ :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市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임 (정답) ⑤

14.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적용사례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금체납 - 행정상 강제징수
- ②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이 곤란한 경우 - 이행강제금
- ③ 식중독 원인의 음식물 - 행정상 즉시강제
- ④ 대체적 작위의무 - 행정벌
- ⑤ 도로교통법규의 위반행위 - 행정질서벌

☞ ①②⑤ : 모두 옳음. ③ : 옳음. 식중독 원인의 음식물에 대해 폐기처분하는 것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④ :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적절한 수단이다. (정답) ④

15. 행정쟁송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이다.
- ② 민중소송은 객관적 쟁송이다.
- ③ 당사자 소송은 주관적 쟁송이다.
- ④ 취소심판은 항고쟁송이다.

⑤ 항고쟁송은 시심적 쟁송이다.

☞ ①②③④ : 모두 옳음. ⑤ : 틀림. 항고쟁송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쟁송으로서 시심적 쟁송이 아니라 복심적 쟁송이다. (정답) ⑤

16. 허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 허가는 형성적 행위라고 보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다.

② 절대적 금지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

③ 대물적 허가의 효과는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④ 허가는 직접 법령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⑤ 허가의 대상은 사실행위에 한정된다.

☞ ① : 틀림. 최근에는 허가의 형성적 행위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통설은 허가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명령적 행위라고 보았다. ② : 틀림. 허가의 대상이 되는 금지는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상대적 금지이다. ④ : 틀림. 법규하명은 가능하지만 법규허가란 있을 수 없다. ⑤ : 틀림. 허가의 대상은 사실행위가 대부분이지만 법률행위(≠ 무기거래 행위)도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 옳음 (정답) ③

17. 국가배상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은 배상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②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③ 피해자는 배상심의회 결정에 거치지 아니하고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⑤ 판례는 국가배상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 ①②④⑤ : 모두 옳음. ③ : 틀림. 국가배상법은 종래 배상심의회 결정전치주의(=필요적 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

다'고 규정하여 종래의 결정전치주의(=필요적 결정전치주의)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하였다. (정답) ③

18. 다음 중 현행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를 정확히 열거한 것은?

- ① 취소심판, 당사자심판, 의무이행심판
- ②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 ③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위법확인심판
- ④ 취소심판, 예방적부작위심판, 의무이행심판
- ⑤ 당사자심판, 의무이행심판, 예방적부작위심판

Ⓔ ② : 행정심판법 제 4 조 참고 (정답) ②

19. 행정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행정벌에는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 ② 행정벌과 징계벌은 병과가 가능하다.
- ③ 행정형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 ④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행정질서벌은 원칙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한다.

Ⓔ ②③④⑤ : 모두 옳음. ① : 틀림. 행정벌 중 행정형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만, 행정질서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20. 다음 중 판례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경우는?

- ① 독촉과 가산금·증가산금 징수처분 사이
- ②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
- ③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사이
- ④ 과세처분과 채납처분 사이

⑤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사이

㉔ ② :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지만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④⑤ : 이들에 대해서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 ①